

‘열린’ 바다 위의 분쟁*

: 식민지 관행과 해양자유론의 재고찰

안미정**

|| 目次 ||

1. 서론
2. 담론과 관점
3. ‘열린’ 바다로: 식민지 시대의 이동
4. 식민지 관행 “自由入漁”와 해양자유론
5. 식민지 이후: ‘밀려 온’ 바다에서

1. 서론

흔히 ‘해녀’라 불리는 제주의 잠수(잠녀)¹⁾에 관해 한·일 양국의 지

* 이 논문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제 45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글로벌시대의 여성과 생활실천-해녀의 ‘전통’, ‘주체’, ‘자원’을 둘러싼 새로운 접근>, 2011.12.17,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저자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08-361-B00001).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1) 저자는 이 글에서는 잠수업을 하는 여성을 잠수(潛嫂)라 부르고자 하며 그 까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해녀’와 한국의 잠녀/잠수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어업이라 하겠으나 한·일간 서로 다르게 지칭되어 왔으며, 또한 서로 다른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잠수(잠수)는 잠녀(잠녀)와 더불어 제주지역사회에서 널리

역 간 논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 내용은 이 여성의 어로문화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왔다. 2006년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의 제주해녀박물관 개관 기념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이후 박물관의 주관 하에 2010년까지 매년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2011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의 주관 하에서 등재에 관련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하였다.²⁾ 이 과정에서 잠수와 마찬가지로 같은 어업을 하는 일본의 해녀(海女,あま)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시작되었고 심포지움 참가를 계기로 미에현 토바시(三重縣 鳥羽市)의 해녀들과의 상호 방문 교류가 이뤄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류와 학술적 관심의 바탕에는 점차 글로벌화되어 가는 사회적 변화 속에 지역의 '전통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하였다는 인식과 함께, 또한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어떻게 보존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라는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심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이들 한·일 여성 잠수업자들이 조우(遭遇)하였던 일은 이전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890년대 일본 미에현 지마시(志摩市)의 해녀들이 부산의 영도에 진출하였던 것들을 수 있다.³⁾ 제주 잠수들 역시 한반도를 비롯 일본의 식민지 경영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주요 거점으로서 부산이 공통 거점이었다. 당시 부산에는 일본으로 해조를 수출하는 해조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본 해녀는 1929년

사용되어 온 현지용어이며 지금도 살아 있는 언어이다.

2)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제주해녀:항일운동, 문화유산, 해양문명』 (제주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2006.6.7~6.8), 200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토론회, 2011.10.17), 2011.

3) 福田清一, 『志摩と朝鮮を小舟で往復した志摩の海女』, 2006, pp.138~165.

이후 한반도로 출어하지 않았는데, 이는 제주 잠수들 곧, 식민지 여성이 그들의 노동을 대신한 저임금 노동으로서의 비교우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⁴⁾ 식민지 시기 동안 제주 잠수들의 타지로의 출항이 급증하였던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 제주도 잠수들이 일본 고지현(高知縣)에서 물질을 하였는데 이는 두 지역 간 상호 우호 교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잠수들은 목돈을 벌고, 지역사회로선 이들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였다.⁵⁾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때 한 잠수가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이 교류는 한차례로 끝이 났으나, 이 일은 해방 후 지금까지 일본 바다에서 이뤄진 잠수들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공식적 입어(入漁)였다.

이처럼 두 상황이 전개된 배경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이후 양국 간의 정치적 협정이라는 변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양상은 국가단위를 넘어 지역사회가 하나의 문화를 공동분모로 하여 글로벌화를 모색한다는 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화’로 모색되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하나의 ‘문화재’로서 자격을 얻은 후 다시 세계 유산으로서의 등재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 문화를 ‘글로벌화’하려는 상황은 결코 국가체제로부터 자유로운 그 어떤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국가와 지역, 식민지 체제하의 경험과 그 이후라는 두 층위를 고려하면서 잠수(潛嫂)들의 어업 문화와 이동 역사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식민지 시대에 돈을 벌기 위해 한시적으로 출항한 여성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그 이동에 따라 축

4) 李善愛, 『海を越える濟州道の海女』, 明石書店, 2001, p.32.

5) 제남신문, 「日本출가海女團 귀국: 20만원씩 저축해 호뭇해 하고」, 1970년 8월 27일 기사. 제주도수산당국은 일본 외에도 뉴질랜드와 호주 등지로 잠수들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조선일보, 「해외진출 자원조사」, 1973년 1월 1일 기사.

발된 갈등과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해양론’의 의미를 검토해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잠수들의 타향살이⁶⁾는 제주 지역사회 안에서 고정된 틀을 형성해 오고 있다고 하겠으며, 그 내용은 강한 모성의 희생과 애환이라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고정된 틀은 그 이동에 얽힌 다양한 사실과 의미들을 가려버리거나 거리를 두게 만들으로써 이들 여성들의 생활 경험이 하나의 역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한다. 또한 잠수들의 이동이 식민지시대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은 식민지시대와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게다가 ‘전통’을 소재로 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은 한 문화의 표면적 형태에서가 아니라 문화의 심층적 이해를 통해 접근할 때 비로소 그 문화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담론과 관점

2-1. 전통적 담론의 해체

여러 ‘해녀’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듯이 이때의 ‘해녀’란 제주도와 제주도 출신의 잠수들을 의미하고 있다. 길게 잡아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제주도의 해안가 여성들의 어로(도구), 신앙, 민요, 타향살이, 남녀의 노동분업, 어로조직(“잠수회”), 사회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 왔다. 그 가운데 이들이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 나가 일을 한 후 벌어들인 현금은 제주도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

6) 잠수들의 타향살이란 고향을 떠나 한시적이거나 타지에서 자맥질 하며 돈을 벌었던 어로생활을 말한다. 이러한 경험을 두고 학자들은 ‘바깥물질’ 혹은 ‘출가(出稼)물질’이라 지칭하기도 하였으나(제주도 1996), 이때 출가(出稼, 데카세끼)란 일본 어민들의 역사에서 흔히 보이는 타지(특히 타국) 출어를 뜻한다.

해 왔다는 사실은 곧잘 언론을 통해 지적될 만큼 제주인의 진취성을 보여주는 일반적 언설이다. 더군다나 여성이 타향살이를 하며 돈을 벌고, 그 일이 바다 일이었다는 점은 그 노동의 역겹과 더불어 고난을 감내해야 하였던 헌신적이고 강인한 어머니상을 구축하여, 잠수는 곧 생활력 강한 제주여성을 대변하는 상징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세대계승이 단절되어 계속 감소하는 잠수 인구의 변화는 곧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 지역사회는 이른바 ‘위기의 문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재생산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기 보다는 아련한 옛 기억으로 ‘간직’ - 이를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기억의 ‘보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하고자 하는 심정적 토대 위에서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떠한 문화의 보존과 지속이 그 문화에 대한 애정이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으나, 그러한 애정어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달리 말해 그 문화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점과 상통한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의 잠수업자의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국가의 제도와 정책은 물론 지역 단위에서의 증원을 목적으로 한 정책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사라져 버릴 지도 모를 위기’의 문화라는 것은 실제적인 사회적·문화적 위기로서 수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는 무관한(적어도 무관하리라고 간주하는) 언설이자 담론상의 위기로서 존재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위기성’을 강조함으로써 파급될 경제적 이해가 자리한다면 그 문화는 계속 ‘위기의 문화’라는 정체성 안에 가둬져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잠수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 담론은 그 안에서 서로 모순적인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강인한 여성상으로 구축된 이미지 외에도, 잠수들은 매력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제주도 개발과 더불어 부흥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음을 지

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독특’하고 ‘이색적’인 것이 쉽게 관광객의 볼거리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통’을 강조하는 언설은 역설적으로 그 문화를 상품화하는 것과 그다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잠수들의 경우, 근로의 여신으로 미화되는 반면 실제 그들에게는 관광의 대상으로서 심리적 소외감을 초래하였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설령, 최근 잠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상품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치더라도 말이다. 게다가 세대계승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지역사회의 상징적 미화와 달리 그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잠수에 대한 이러한 괴리는 ‘신화화’라는 말로써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권귀숙 교수는 잠수들의 이들의 강인성을 강조하는 담론 뒤에는 끊임없이 노동에 포섭되도록 하는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둘러싼 신화화를 비판하였다.⁷⁾ 이들이 역세계 일하는 노동을 칭송하면 할수록 잠수뿐만 아니라 여성의 더욱 노동에 종속되도록 조장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노동을 둘러싼 이중성도 존재한다. 여성의 역세계 일한다는 것은 생활력이 강한 여성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는 여성에 대한 기피를 동시에 초래한다. 게다가 ‘그 일’이란 중세로부터 부역이었던 천한 일이었음을 아는 ‘제주사람’들은 - 잠수 그 자신뿐만 아니라 - 근대적 교육을 받아 ‘직장’에 다니길 선호한다. 즉 이들의 노동인 ‘물질’은 오래되고 낡은 일로서 현대사회의 직업으로서 고려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작은 편차를 보이면서도 ‘힘든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 보는 시각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⁸⁾

7)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제: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30(봄), 1996, pp.227~256.

8) 안미정, 「濟州海女에 대한 이미지와 社會的 正體性」, 『濟州島研究』 제15집,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잠수들의 이동은 강한 여성상을 구축하는데 주요한 모티브를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그 내용은 잠수의 개척과 도전, 강인함을 보여주는 또 다시 희생적인 어머니의 상으로 구속되어 버리고, 애환 중심의 서사는 이들이 왜, 어떠한 구조 속에서 이동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놓쳐버릴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이 또 하나의 ‘신화화’라고 생각한다. 신화는 그 자체로 대상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문화적 장치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 속의 문화에 대한 신화화는 지금의 잠수들이 놓인 사회적 조건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방기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들이 겪은 식민지 전후의 시대적 경험은 한국 여성의 문화사 속에서 고려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점에서도 이 글은 한국사회가 근현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업집단이 겪은 사회변동을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2. 바다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이 글에서 식민지 시대 잠수들의 이동 및 갈등을 살펴보는 필자의 기본적 관점은 바다(자원)에 대한 접근이 열려(open) 있었다는 곧 ‘자유 바다(freedom of the sea)’론에⁹⁾ 대한 비판, 그리고 또 하나로서는 바다는 동질적 성격을 가진 커먼즈(common)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서구산업사회에서 바다는 자유로운 공간이며, 어로영역은 무제한적 접

제주학회, 1998, pp.153~193.

9) 공해(公海)가 어떤 국가의 주관적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는 국제법의 원칙으로서 공해의 자유라고도 한다. 해양에서의 자유를 전제로 한 내용 가운데에는 항행이나 상공 비행, 과학적 조사 등도 있지만 어획을 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이 해양이 자유라는 학설을 해양자유론이라 하여 그로티우스(Grotius)가 자유해론에서 전개한 것이 기원이며, 이에 반대하는 폐쇄해론 등 많은 반론서가 있지만 국제교통의 필요성에 의해 19세기 이후 우세하게 되었다.

근(open-access)이 가능한 곳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또한 어로 사회는 자원이 소진되지 않는 사회로 여겨지고, 어로는 육상 환경에서 부족한 것을 번상/대체하는 것이거나 혹은 목가적이며, 재미있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¹⁰⁾ 아이슬란드의 해양문화를 연구한 팔슨(Pálsson 1991)이 지적하기로 이러한 관점이 보편화된 것은 유럽의 식민지 확장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한다. 16-17세기 동안의 식민지 확장은 오히려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바다에 대한 지역의 규정을 재강요 하였고, 그런 규정은 휴고 드 그로티우스(Hugo de Grotius)의 1608년 ‘자유의 바다’라는 영향력 있는 보고서에 의해 더욱 유럽 자본주의를 확장하는 국제적 법에 수용되게 되었다.¹¹⁾ 따라서 무제한적 접근(open-access)의 관점은 유럽의 식민지 확장에 의해 서구적 관점이 제3세계에 법적 규정을 강요하였고 그에 따라 ‘자유의 바다’라는 인식을 형성하여 온 것이다.

오늘날 국제해양법의 기초를 이루는 ‘자유의 바다’에 대한 비판은 이미 서구학계에서 시작되었고, 그 바탕에는 서구와 동일하지 않은 비서구사회의 해양관과 문화적 규범과 관습들에 대한 민족지적 보고들이 있다. 팔슨은 바다를 탐험과 미지세계에 대한 도전으로 대변되는 서구인의 해양관에는 바다를 ‘열린(open)’ 세계로 바라본다면, 다른 사회에서의 바다는 점유(보유), 폐쇄가 있는 등 해양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였다. 폴리네시아 및 미크로네시아 등 태평양의 여러 지역은 현지조사한 해양인류학자 아키미치(秋道) 교수는 바다를 세 가지의 커먼즈(communs), 즉 지역 공유지(local-commons), 공공 공유지(public-commons), 지구적 공유지(global-commons)로 그 성격을 구분한 바 있다.¹²⁾ 그는 경제학자 하딘(G. Hardin)이 지적하는 이른바 ‘공유지

10) Pálsson, Gísli, 1991, *Coastal Economies Cultural Account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1, p.23.

11) *ibid.* p.52.

의 비극’이 왜 아시아 태평양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지를 다양한 해양부족들의 관습을 통해 소개하여 왔다.¹³⁾ 이처럼 바다를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본다는 것은 해양 세계관의 일면에 해당하며, 그것이 서구세력의 팽창과 더불어 확대·강화되어 왔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현재 분쟁적이다. 만약 자원에 대한 접근이 무제한적이라면 연안의 자원채취권을 두고 벌어진 사회적 분쟁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과 더불어 필자가 보기에 어민들의 바다는 평면적 공간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사회적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보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연안 가까이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어장, 곧 아키미치 교수가 분류한 지역 공유지의 경우는 중층성(重層性)을 띤 사회적 공간임을 알 수 있다.¹⁴⁾ 어장은 마을주민들의 공유자산인 동시에 어업자의 생업터이기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의 공공자산 및 국가의 영해로서 공공성을 띤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장이라는 일정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생태적이고 물리적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맥락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2) 秋道智彌, 『commonsの人類學: 文化・歴史・生態』, 2004, 内外印刷柱式會社, pp.12~24.

13) 秋道智彌, 이선애 역, 『해양인류학』, 민속원, 2005.

14) 안미정, 「바다밭(海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전통의 정치: 제주도 잠수마을의 나잠(裸潛)과 의례」, 『한국문화인류학』 제39집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6, p.340.

3. ‘열린’ 바다로: 식민지 시대의 이동¹⁵⁾

잠수들의 이동이 활발히 전개된 것은 식민지 시대에 들어서이다. 물론 이전에도 이동은 있으나 그 또한 일본의 경제적 수요에 따른 것이었으며,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이동을 더욱 가속화시켰던 것이다. 곧 제주 연안에서 이뤄지던 잠수들의 어업(“물질”)을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뻗어나가게 만들었다. 1910년대 전반에는 2,500명에 이르던 이동자가 1910년 후반에는 부산 울산 지역의 이동자만 4천명을 헤아리게 된다.¹⁶⁾ 섬을 떠나 ‘바깥’으로 나가 “물질”하기 시작한 것은 1879년 전라남도 청산도였다고 하거나,¹⁷⁾ 1880년 경 경상남도 울산과 기장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다도해 각 도서와 거제도, 부산 근해, 경상북도 각 연해와 강원도, 함경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도 하며,¹⁸⁾ 1895년 부산의 영도였다는 주장도 있다.¹⁹⁾ 대략적으로 보면, 19세기 후반부터 제주도 잠수들의 타지 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첫 이동지역으로 한반도의 남·동해 지역이라고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잠수들은 조선 전역과 일본, 대련, 청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하였다.²⁰⁾

15) 제주 잠수들의 부산으로의 이동과 갈등에 관해서 필자의 논문(2010)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이동과 갈등에 개입되어 있는 ‘바다/해양의 성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겠다. 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실들은 이전 논문과 중복되므로 간략히 제시하도록 하겠다.

16)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각, 2004, p.259.

17) 최성애, 「해녀의 이주생활사: 부산 용호어촌계 해녀에 관한 사례연구」, 『水産業史研究』 제2집, 1995, p.65.

18) 강대원, 『濟州潛嫂權益鬪爭史』, 제주문화, 2001, p.106.

19)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p.259

20)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강대원, 『濟州潛嫂權益鬪爭史』, 2001; 이성훈, 『해녀의 삶과 노래』, 2005, 민속원, 200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濟州海女史料集』, 경신인쇄사, 2009.

<표 2> 1930년대 잠수들의 이동지역과 인구수 (단위: 명)

1937	한반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강원	함남	함북	황해	합계
		408	19	1,650	473	110	54	32	5	50	2,801
	일본	對馬島	高知	鹿兒島	東京	長崎	靜岡	千葉	愛媛	徳島	합계
750		130	55	215	65	265	51	10	50	1,591	
1939	한반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강원	함남	함북	황해	합계
		367	7	1,581	308	141	60	106	-	14	2,584
	일본 외	對馬島	高知	鹿兒島	東京	長崎	靜岡	千葉	愛媛	青島	합계
686		95	18	144	54	365	67	35	28	1,492	

- 1) 1939년 *청도는 중국의 칭따오를 말한다.
- 2) 일본과 일본 외 지역의 합계는 인용 원문의 오차를 정정하여 제시하였다(강대원 2001: 146).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유독 경상남도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잠수들이 이동하였다. 해역을 고려해서 보면 한반도의 남·동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수들은 타지에 가서 경제적 벌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노동을 한 후 귀향을 하는 패턴을 띠고 있었다.²¹⁾ 이러한 노동 패턴은 잠수들이 아예 섬을 떠나 다른 곳에 정주(定住)하기 위해 이동하였던 것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 연안만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이동은 개별적 혹은 가족단위의 이동이 아니라 여성들이 무리를 지어 간 집단성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수산산업과의 연관성을 짐작케 해준다. 곧 “물질”을 할 수 있는 해산물 채취노동자로서 타지로의 이동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가속화된 타지 이동의 요인은 첫째, 일본인 어업자들의 진

21) 김영돈, 위의 책, 1999; 강대원, 위의 책, 2001; 좌혜경 외 9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미』, 민속원, 2006.

출, 특히 잠수기선(潛水器船)에 의한 제주도 연안 어장의 황폐화, 들깨, 현금소득의 기회 및 목돈 마련, 셋째, 교통수단의 발달에 의한 이동의 촉진, 넷째, 수산물 유통경제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수산물 상품경제의 영향이 크다 하겠으며, 그것은 식민지 지배 하에서 빠르게 확대되었던 것이 근본적 요인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이동한 잠수들이 채취한 것은 톳이나 미역과 달리 식용할 수 없었던 우뚝가사리를 채취하기 위해서였다. 식민지 시대에 들어서 우뚝가사리는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우뚝가사리의 1톤 당 가격은 다른 해조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높(았)다. 우뚝가사리 가격이 가장 낮았던 1916년 조선인이 가장 선호하고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던 미역과 비교해보면 우뚝가사리는 미역가의 66배이다. 또한 우뚝가사리 가격이 가장 좋(았)던(높(았)던) 1930년과 비교해보면 우뚝가사리는 미역가의 1,066배였다. 우뚝가사리 어장은 제주해녀에게는 전복어장 이상으로 생계를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은 경상남도였다.²²⁾

조선인이 선호하던 미역보다 우뚝가사리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것은 일본의 비단산업의 발달과 공업원료로 사용되었던 사정과 연관이 깊다.²³⁾ 일본으로 우뚝가사리가 수출된 것은 1877년부터 나타나며, 1893년 오사카 비단제조상들과 상인조합에서는 조선산(朝鮮産) 가사

22) 김수희, 「日帝時代 濟州 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 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제주해녀박물관 개관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6.6.7~8.),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2006, p.78.

23) 석화채(石花菜), 천초(天草)라고 불리는 우뚝가사리는 양갱이나 과자를 만드는 한천 재료로, 감태는 상처를 소독하는 의약품과 화약을 만드는 재료로, 가사리류는 비단에 바르는 풀이나 건축용 자재로 이용되었다. 김수희, 위의 논문, p.71.

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부산 총영사관에 문서를 보내 가사리 품질 검사를 의뢰하고 있었다. 우뭇가사리는 비단의 광택을 내기 위해 바르는 원료가 되었으며, 일본산(日本産)이 쉽게 변색이 되는데 반해 조선산은 품질이 좋아 일본의 비단 제조상들이 선호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내 수요가 증가하자 일본상인들이 산지구매와 직접 어획에 개입하게 된 것이었다.²⁴⁾ 결국 잠수들의 집단적 이동에는 국내(조선) 수산물 수요 보다 일본의 산업경제의 수요에 따라 이뤄지고 있었음과 동시에 식민지 수산경제의 말단 생산자로서 이들 여성들이 편입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915년 당시 잠수들은 경상남도 어장에 1,700명, 남해안 다도해 방면에 300명, 그 밖에 다른 지역이 500명으로 총 2,500명이 진출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생산한 해초는 부산과 목포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었는데, 1926년 당시 전체의 73%가 부산에서 거래되고 있었다.²⁵⁾ 또한 잠수들은 우뭇가사리의 채취시기에 맞춰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때 잠수들은 일본 해조상의 자금을 받은 현지 객주들로부터 사전 계약금(전도금)을 받았다. 노를 저어가며 이동하는 잠수들 외에도, 기선(汽船)을 타고 이동한 후 다시 범선을 타고 20~30명이 한 조가 되어 각 지로 출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동해안을 북상해가면서 일을 하고, 9월 하순에 청진에 도착하여 기선으로 귀향하였다.²⁶⁾

이러한 패턴 속에서 잠수들은 누구와 어떠한 관계 속에 이동하였을까? 이동의 발생은 이들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여줄 것이다. 섬을 떠나 타향으로 이동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련의 노동과정에는 모집인, 선주, 객주, 거간꾼, 일본인 해조상인 등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24) 김수희, 위의 논문, pp.73~74.

25) 김수희, 위의 논문, p.80.

26) 李善愛, 『海を越える濟州道の海女』, p.35.

지적되고 있다.²⁷⁾ 가령, ‘육지’에서 내려온 모집인을 통해 출항에 나선 잠수들은 자신들이 타는 배의 선주에게 배 값을 내야하였고, 지역의 어업조합 및 마을주민에게 입어료를 냈으며, 자신들을 객주와 연결시켜 준 거간꾼에게도 사례비를 냈다. 또한 객주로부터 ‘준비금’을 사전에 받고 타지로 이동하여 잠수가 객주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빚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이 보편적이었다.²⁸⁾ 그리고 이 같은 계약관계의 이면에는 객주에게 자금을 지불하던 일본 해조상인이 있었다. 객주는 중간에서 해산물의 시세 차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준비금이라는 사전계약 방식을 통해 잠수들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지배적 위치에 있었다. 이처럼 출항한 잠수들의 노동과정은 다양한 사람들이 복합적·체계적으로 개입한 가운데 전개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잠수들의 출항은 현지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타지출신의 어업자가 자신들의 마을 앞 어장에서 어업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잠수들의 이동은 현지 주민의 반발과 분쟁을 야기했고 그것은 해방 후에 더욱 거세게 전개되었다.

4. 식민지 관행 “自由入漁”와 해양자유론

식민지 시대뿐만 아니라 잠수들의 타지 이동은 현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그 분쟁은 지속되었다. 그 맥락은 식민지시대 이후 채취권을 지역주민이 더 이상 외지인(제주 잠수)에게 줄 수 없다는 측과 기존 해왔던 어업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상호의 어업주권을 지키려는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식민지’ 상황에서 용인되었던 입어권

27) 안미정,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 지역 간 경계를 넘는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담리문화』 제37집, 2010, pp.459~463.

28) 김영돈, 『한국의 해녀』, 1999.

은 해방 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양 측 모두 상호 어업 ‘주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바다는 누구의 것인가. 이들의 출어담(出漁談)은 그동안 고난과 애환의 역사 및 언설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것이 이뤄진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식민지 전후 발생한 갈등을 어장/바다에 개입된 해양관과 연관지어 재고해보고자 한다.

4-1. ‘열린’ 어장의 ‘자유’ 입어

이동을 둘러싼 분쟁의 시작은 1912년 벌어진 제주잠수와 울산의 연안마을 주민간의 소동에서 그 시작을 볼 수 있다.²⁹⁾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1895년경부터 제주도의 천초에 주목한 육지부의 해조업자들이 제주도에서 잠수들을 고용하여 해초를 채취하기 시작하였고, 마을주민들에게 채취예(採取禮)라 하여 술을 제공한 후 조업을 했었다. 해초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부산 해조상(海藻商, 당시 부산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해조를 일본으로 수출시키는 일을 함)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객주들이 잠수의 모집과 감독이라 하여 제주도에 와서 잠수들을 모집하고, 잠수들에게는 전도자금을 주어 육지에서의 채취작업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채취물의 소득 중 일부를 현지에 ‘예물(禮物)’로서 지불하였다.

해초의 가치가 상승하던 1911년 울산군 장생포에 거주하던 야마구치 현 출신의 야스도미(安富)는 한천 제조를 시도, 울산군 연안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초, 은행초 등 채취권을 사들이고 마을과 계약하여 지역의 일부 어민과 미에현 해녀들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부산 해조상(海藻商)과 계약관계에 있던 제주도 잠수들이 울산으로 왔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야스도미는 제주 잠수의 입어를 거절함으로써 일

29) 강대원, 『濟州潛嫂權益鬭爭史』, pp.109~110.

대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분쟁을 서술한 강대원은 이것이 겉으로 마을주민과 제주도 잠수들의 분쟁으로 보이지만, 그 진상은 사실 야스도미와 부산 해조상 간의 상권 확보를 위한 분쟁이라고 지적하였다.³⁰⁾ 그리고 식민지의 어장은 해조상인들에게 매매 거래되고 있었으며, 계약의 주체는 ‘마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1913년 울산, 기장 등지에서 제주도 잠수들의 입어(入漁)가 가능하도록 되었다. 해조판매를 목적으로 한 상인들은 경쟁적으로 잠수 모집에 나섰다.³¹⁾ 해초의 가격상승과 1920년 제주도해녀조합의 설립에 의한 판매고의 수익은 잠수들의 이동을 더욱 가속화 한 반면, 1925년 <해녀의 입어에 관한 협정>으로 잠수들은 경상도 지역의 어업조합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입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어쩌면 ‘특별한 혜택’과 같은 것이었으며, 잠수들의 이러한 입어권은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입어권이였다기보다는 해초에 대한 일본의 산업적 수요에 의해 파생된 제한적 권리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잠수들이 어떠한 고용관계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생산한 해초의 처분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생산물의 절반을 일본인 해조회사에 팔아야 했고, 자신들의 이동에 개입된 여러 매개자들에게 각종 수수료를 내어야만 했다. 게다가 인신적 구속은 차치하더라도, 현지 어업조합에 입어행사료와 조합 수수료 외에도 조합의 지도원 수당, 위탁판매수수료, 전도금의 이자와 선주와 모집인에게 제잡비 명목의 돈을 지불해야 하였으므로 결국 자신의 생산한 소득의 20%밖에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³²⁾

그런데 여기서 현지 어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입어가 가능하도

30) 강대원, 위의 책, p.110.

31) 이때 일본의 아마(해녀)보다 잠수들이 상인들에게 선호된 점은 이들의 채취 능력 대비 저임금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32) 강대원, 위의 책, p.150.

록 하였던 이른바 ‘특별한 권리’의 근거는 식민지시대로부터의 관행이 이뤄져 왔다는 데 있으며, 이에 타지에서서의 자유입어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54년 제주도가 현지의 어장매매와 수탈로 인해 잠수들의 입어관행의 재정(裁定)을 정부에 청구하였고, 경북지사와 제주지사 간의 자유입어를 허용하는 각서교환이 이뤄져 1,300여 명이 잠수가 경상북도 9개 조합 지역 내에서 입어할 수 있게 되었다. 1955년에는 잠수 500명 이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상북도 측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가 재차 재청신청을 하여 1956년 천초를 포함 몇 가지 해초와 패류에 대한 채취를 조건으로 1,070명의 잠수가 입어관행을 인정받는다. 이 때 1,070명이라는 수는 일제 말기 발급되었던 쌀과 생필품의 배급카드에 근거한 것이었다.³³⁾ 다음의 신문기사는 당시의 정황을 보여준다.

海女紛爭의 眞相

종래 경상북도 연안 각 어업조합은 그 향유하는 공동어장내의 천초, 은행초, 앵초의 채취행사권을 입찰공매하여 그 대금으로서 어업조합의 경비 혹은 사업자금에 충당하고 있는 현상이며 본 년도에 있어서도 예년과 같이 이를 공매할 것을 공표하였으므로 우리들은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 당해 어업조합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그 중지를 서면 및 직접진정하고 있는 현상이다. 수산업법제10조에 의하여 공동어업권을 어업조합에 0하여 면허하고 조선어업령 제48조로써 기행사권을 조합원에게 부여한 것은 그 어장을 조합원에게 행사시켜 복리를 0모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찰공매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해조류 매수상인 혹은 중간상인에게 행사권리를 부여하여 영세조합원 및 우리들 제주도 出稼해녀의 自由採取를 엄금함은 본래 목적하는 바에 배치되며 또한 영세조합원 및 우리들의 이익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33) 강대원, 위의 책, p.205.

(중략) 그 地先에 소재하는 공동어장내의 앞서 말한 해조류를 채취하고자 하나 매수자가 이를 엄금함으로써 조합이 향유하는 어장이면서도 기 조합원이 이를 행사할 수 없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 행0 매수인 어떠한 방법으로 그 어장을 행사하고 있었던가. 그들은 예년 우리들 제주도 출가해녀를 고용하여 저렴한 0금으로 채취케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상이다. (중략) 이상과 같이 어업조합 향유 공동어장은 그 본래의 사명을 이탈하고 완전 상품화한 감이 없지 아니한 것이다(이하 생략).

(제주신보 1954년6월9일)

1967년 경상북도 지역의 몇 어업조합은 다시 1070명의 입어관행권 소멸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주도 측은 지속적 입어를 주장하며 맞서게 된다. 경상북도에서는 기존에 입어하였던 잠수가 사망하였을 때 입어권은 양도, 매매, 상속될 수 없음에 따라 소멸된다고 한 반면, 제주도 측에서는 입어관행권이 특정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제주해녀'라는 자격에 있으므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여 그 권리 해석에 있어서 마찰을 빚었다. 대구지방법원을 통한 당시의 판결은 입어관행권을 소멸하는 것으로 인정, 1970년부터 제주도에서는 육지로의 이동을 자제도록 하는 캠페인이 전개되기에 이른다.³⁴⁾

4-2. 식민지 자원과 해양 자유론의 상관성

이상의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 제주 잠수들에게 특별히 허가 되었던 '관행'이다. 1911년 어업령의 제정에 따라 총독부는 지역에 어업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그 지역 조합에 전용어업면허를 주어 해당 지역의 어민들이 그 권리를 행사케 하였다. 지역 조합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주 잠수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인

34) 강대원, 위의 책, pp.204~207.

데, 이에 따라 해방 후에도 타지의 어장에서 계속 채취할 수 있는 ‘자유입어권’이 주장된 것이었다. 그리고 입어할 수 있는 지역과 인원 수도 식민지 시대의 근거가 활용된다.

둘째, 잠수들은 현지에 입어료를 지불하여 그 채취권한을 인정받았으며 게다가 제주도의 어업조합원으로서 ‘출가증(出稼證)’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중의 조합원으로서 채취권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현지 조합원은 현지에 정주(定住)함을 전제로 한다. 귀향 패턴을 가졌던 잠수들에게 이러한 조건은 성립되기 어려웠던 것이다.³⁵⁾ 따라서 이후 이들이 현지에 정주를 선택하거나 출륙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 주요한 배경이 된다.

셋째, 현지 조합의 어장 매매와 입어권을 갖지 않는 잠수들의 “밀출가”도 분쟁의 주요 요인이었다. 위 신문에서와 같이, 본래 조합원(지역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유자산인 마을어장(공동어장)이 시장 상품화가 되어버린 점이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듯이, 해방 후의 분쟁은 이미 식민지 이뤄져 온 수산물의 사회적 수요와 시장의 형성, 그리고 이전 출항경험을 통해 형성된 사회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넷째, 식민지시대 만들어진 타지 입어권리가 가진 그 한계성을 알 수 있다. 잠수들의 이동은 해조에 산업적 수요와 맞물려 있었던 것으로 식민지 시대 타지의 해조를 채취할 수 있는/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이렇게 ‘확대된 타지의 어장’에 입어하였던 잠수들의 권리는 현지의 분쟁에서 나타나듯이 온전한 권리로서 행사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식민지 지역주민간의 대립구도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채취된 해조는 일본을 향해 나갔다. 곧 어장에서 어업할 수 있는 생산자와 어업권을 가진 자가 서로 달랐던 식민지 수산경제의 모순적

35) 현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호적을 현지에 두거나 거주해야만 한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때문에 잠수들의 권리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특별한’ 권리였고, 그것은 당시 어업법에 기반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특별 권리가 가능했던 것은 일본의 수산자원의 경제적 수요와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잠수들은 다층적 고용관계 안에서 생산물에 대한 처분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불평등한 분배와 인신적 구속을 초래하는 구조 안에 놓여 있었다.³⁶⁾

이와 같이, 잠수들의 이동을 둘러싼 분쟁은 지역 간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의 양상이었으나, 그 안에는 식민지 수산 자원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수요가 낳은 식민지 지역 간 분쟁이었다고 하겠다. 채취자인 잠수개인에게 있어서도 이동은 당장의 현금소득의 기회로 작용하였으나, 온전한 입어권리로 행해지지 못하였고, 제도화 되는 데에도 나가기도 못하였다. 게다가 거주하지 않는 다른 마을어장에서 외지인이 어업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거주자에게는 권리의 침해라는 면에서 이미 분쟁적이다. 이때의 어장이란 거주 주민의 공유재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아키히치 교수는 지역 공유지(local-commons)라 하였으며, 대다수의 사회에서 주민에 의한 배타적 점유의식이 형성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잠수들이 입어한 타지의 어장은 곧 그 지역의 로컬 커먼즈였다. 모집인을 따라 간 잠수들은 ‘무주물의 바다’에서 해초를 채취한 것이 아니며, 이들은 또한 입어권을 가진 자로서 고려되기도 하였으나, 어장의 매매와 ‘자유입어’권을 거부하는 지속적 분쟁에 속에 있었다.

잠수들의 자유입어권은 식민지 체제 안에서 배태된 제한적 입어의 ‘자유’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마을주민들 혹은 몇몇의 사족에 의해 점유되어 오던 ‘닫힌’ 바다가 ‘열린’ 상황을 의미하며 거기

36) 제남신문, 「빠앗긴 30년 삶의 터전: 부산 남천동 정착잠수 60명 눈물의 호소」, 1968년 3월 11일자 기사 참조.

에는 식민지 수산자원에 대한 요구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현지의 주인(조합원)이 아닌 자가 마을의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 곧 어로활동을 하는 것 - 는 식민지 조건 안에서 벌어진 특수함이다. 결국 ‘자유입어’의 주장이 현지에서 용인되기 어려웠던 것은 해방 후 마을주민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던 어장의 개방을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잠수들의 온전한 권리행사는 현지주민에게 수용될 수 없는 논리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작용한 논리는 바다가 ‘무주물의 열린 공간’으로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유의 바다’라는 관념에 있다. 식민지 (바다) 공간 안에서 잠수들은 피고용자가 되어 ‘넓어진’ 어장으로 경계를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개입된 바다란 식민지 자원을 위해 대양을 건넌던 서구세력이 주장하였던 자유의 바다와 닮은꼴을 하고 있다. 무주물의 바다는 탐험과 도전을 통해 개척되는 곳으로서 도전하는 자의 ‘자유지’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이미지화 되지만 기실 그 바탕에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욕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5. 식민지 이후: ‘밀려 온’ 바다에서

이상에서와 같이, ‘자유의 바다’는 식민지 조선(한국)에 있어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바다(어장)로서 ‘열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제주 잠수들의 이동을 사례로 그들이 주장하였던 ‘자유입어’란 의미의 본질적 맥락은 이러한 해양 자유론에 기초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식민지 이후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의 분쟁은 식민지 전후 전개된 대표적 분쟁 사례로서 언급하였다. 식민지 하에서는 식민과 피식민이라는 이분법적 지배체제 속의 분쟁이라고 한다면, 해방 후 발발한 지역 간 분쟁은 식민주의 및 그

영향에 대해 보다 다원적 측면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부분적이거나 식민지 이후 변화를 부산 영도에 정착한 잠수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1. 부산 영도의 “해녀촌” 형성

부산은 잠수들의 이동 거점이기도 하고, 현재 시단위의 행정구역 상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잠수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부산 전체적으로는 2005년 기준으로 할 때, 476명의 잠수업자들이 있고, 이는 제주도와 경상남북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치이다. 산업공단과 대규모 아파트, 빌딩과 수출입 항만 도시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도시의 연안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한다는 것은 왠지 낯선 풍경처럼 다가온다. 영도 섬의 가장 동쪽에는 명승지로 유명한 태종대가 있으며, 그 남서쪽 방면 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해산물을 판매하는 “중리 해녀촌”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아래 그림은 영도 A어촌계의 어장도이며, 각각의 지점들은 고정적으로 그룹을 지어 일하는 잠수업자들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며 이외에도 해산물 장사가 이뤄지는 곳이 세 곳 있다. 그 가운데 별표를 나타낸 곳이 중리 해녀촌이다.

이곳은 중리산 남서쪽 방면 그다지 넓지 않은 갯가에 형성된 곳으로서 본래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아니다. 평일에는 아침에 6시~7시 경에 물질을 시작하고 낮이나 이른 오후부터 해산물 장사를 한다. 붉은 플라스틱 통에 멧게, 개불, 성게, 홍합, 낙지, 고동 등을 담아놓고 낚시꾼이나 산책객 혹은 일부러 온 손님들이 주요 고객들이다. 식당가처럼 번듯한 집을 지어져 있는 곳도 아니고, 자세히 보면 시멘트로 만들어진 해산물 수족관과 바람을 피해 물을 끓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하나의 시설들이 눈에 들어온다. 작업복을 갈아입는 탈의장은 파란색 천막으로 쳐져 있는데 이곳은 손님을 맞는 식당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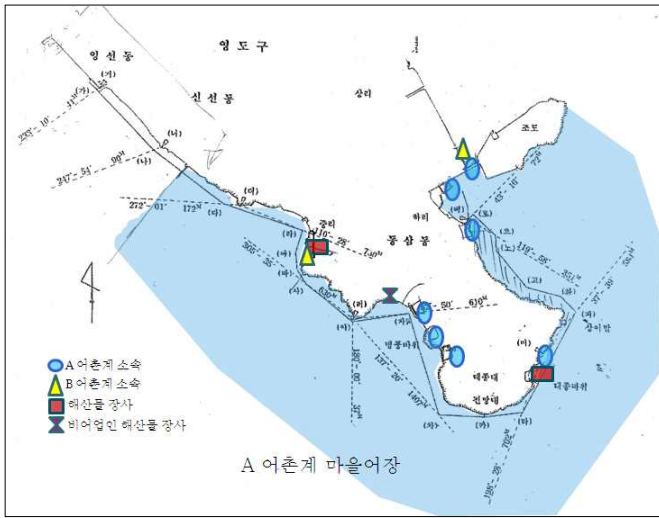


그림 1 영도의 A어촌계 어장과 잠수업자들의 분포

2010년 말 기준, 영도의 어업인구는 286명이며, 그 가운데 잠수업을 하는 여성들이 180명이 있었다. 이들은 A·B어촌계로 나뉘어 소속되어 있는데, 2011년 A어촌계에는 97명의 잠수업자들이 있었다.³⁷⁾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잠수업자들의 65%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A어촌계 어장에는 해산물 장사가 이뤄지는 곳이 세군데 있지만, 두 곳은 어업과 무관한 일반 해산물 판매가 이뤄지는 곳이고 한곳인 중리 해녀촌이 B어촌계의 잠수업자들이 해산물을 판매하는 곳이다. 이처럼 다른 어촌계의 마을어장에서 입어 및 장사를 한 것은 약 40년 전쯤부터이다.

“처음엔 마 이렇게 장사도 심하게 안하고 그때는 이 앞에 전복이 바글바글했어. 시장같이 이렇게 장사 안했거든. 그래 그대는 시장가야 해삼... 전복 따고 가서 시장가서 팔고 그래가지고 허다허다 보니까 손님이 한 사람

37) 2011년 7월 26일, A어촌계 사무실, 간사 김○홍씨 인터뷰에서.

두 사람 오기 시작하니까 인자 그때부터 여기 앉아 죽치고 앉아 있는 거지. 바다 물이랑 우리가 이거 다 매립했잖아. (중략) 그 때는 이렇게 번잡하지 않으니까 손님들이 안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 갔잖아.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오고 하다보니까 이제 점점 알려지고 이제 돌빠꾸(갯바위)에 앉아가지고 또 까주고, 나머지는 또 시장가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손님이 점점 많아지는기라”

처음부터 해산물 장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었고 당시만 해도 이들의 장사를 막는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구청의 단속이 심해졌고 때문에 구청을 찾아가 데모도 하곤 했었다. 뿐만 아니라 A어촌계 내의 잠수업자들과의 분쟁도 발생하였다.

“아이고, 와 하지 말라 난리가 안 났나. 이제는 여기 장사 잘된다 하니까 몇 년 전에는 와가 이거 우리 장사 못하게 해가 얼마나 몇날 몇 달을 데모 했다. 몇 달을. 지들 장사 할끼라고. 이제 우리보고 나가라고. [필자: 근데 어떻게 지켜수과?] 궁께 막 싸워가지고 하다보니까네 우리가 이겼지. 지네는 그게 ... 우리가 여기서 셋방도, 우리 하면은 우리가 권리 있잖아. 셋방 살이를 우리가 먼저 들어와서 했으니까 지네는 해가 봐야 법적으로 가도 우리도 할 말 있거든. 그러니까 말 리가 말 리가 이제 지니깐은, 정착지가 돼버렸지.”³⁸⁾

이런 싸움에도 불구하고 B어촌계 잠수업자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어장을 잃고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리 해녀촌이 형성된 것도 이들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었다.

“그때는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거 해 가지고 우리 못 하게 하니까 우리는 저쪽으로만(영도의 북동쪽 방면) 하다가 이쪽으론 아무도 안했어. 쫓겨 나

38) 2011년 7월 26일, 중리 해녀촌, 이○숙씨(제주출신) 인터뷰 가운데에서.

왔어. 그쪽으로 가면은 해녀들이 우리보고 못하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때부터 교통이 불편했어. 불편해가지고 내버린 데 찾아찾아 오다보니까 여기가 이제 정착지가 된 거지”

이들이 어장을 잃고 “찾아찾아” 온 것이 중리 앞 바다였던 것이며 이후 이들은 분쟁을 치르면서도 이곳을 자신들이 먼저 ‘선점’한 것이니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식도 엿볼 수 있다. 현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개 지역 사람들이다. 중리산에 산책로가 생기면서, 운동가는 사람, 낚시가는 사람들이 고객이 되었고, 여름 휴가철에는 “사람 앓을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5-2. 개발에 밀려 찾아 온 바다

이와 같이, 중리 해녀촌의 형성은 자신들의 어장에서 쫓겨난 B어촌계의 잠수업자들이 이웃 어장구역을 자신들의 정착지로 삼아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자신의 어장에서 쫓겨나게 된 것일까? 이는 영도의 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깊다. 영도에는 현재 14만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부산의 대표적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다. 섬 안에는 한국의 대표적 조선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시내와 연결된 3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B어촌계의 어장 안에 있다. 시내에서 섬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바로 B어촌계의 마을어장 구역이라 하겠다. 이처럼 영도 내에서도 산업기지와 개발에 민감히 노출되어 있던 마을어촌계의 어업은 사장 길에 접어들었고, 잠수업자들은 이웃한 A어촌계로 밀려나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다른 마을어장으로 밀려난 B어촌계 잠수업자들은 연중 입을 틀 하고, 그에 따라 해산물 판매 또한 연중 이뤄진다. 일기가 나쁜 날을 제외하고 이곳은 이제 B어촌계 잠수업자들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해산물 판매 방식은 기본적으로 개별적 판매이

나, 일정한 판매 규칙을 만들고 있다. 16명의 잠수업자들(제주출신)로 구성된 이 공간은 따라서 16개의 가게가 있다고 하여도 무방한데, 모든 가게가 거의 같은 해산물을 같은 메뉴로 팔기 때문에 사실 각 가게만의 특별한 경쟁력이란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들은 당번제를 두고 있다.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나란히 이어진 16명의 잠수업자들은 차례로 손님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정해 놓은 규칙인 것이다. 만약 단골손님이 있다면 양보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이 순서를 어기면 서로간의 언쟁이 오가기 일쑤다. 그럼에도 이곳의 해산물 판매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이곳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이 신선하리라는 기대감과 제주말로 언쟁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또한 ‘진짜’ 해녀를 보는 듯한 복합적 의미가 더해져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 고려된다.

하지만, 약 20년 전부터 이 공간에 새로운 이입자가 생겼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사실 엄격히 말하자면 공유지이며 장사에 필요한 전기와 수도를 인근 주택으로부터 끌어당겨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주택 소유자가 해녀촌 주변의 토지 소유주이다. 그는 전기와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그 사용료를 16명에게서 받고 또한 이 해녀촌에서 판매되는 주류 및 음료 판매권을 가진다. 따라서 해산물 판매는 16개 가게에서 이뤄진다고 할 수 있으나 술과 음료는 이 토지 소유주 한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을 해녀촌 잠수업자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으나 불공평한 계약임은 한 눈에 알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 계약의 불공평성을 이 곳 잠수업자들이 모르지 않는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 계약 관계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보기에 그 이유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이유는 그 자신들이 ‘밀려서 찾아 온 어장’이라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들은 A어촌계원으로서 어업권을 가진 잠수업자들도 아니며, 장사가 이뤄지고 있는 갯바위 역시

공공지(公共地)로서 그들이 이 공간적 점유가 타당하다는 공식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곧 해녀촌이라는 조건대에서 형성된 해산물 판매는 그녀들 스스로도 제한적이고 임시적으로 부여된 불안정한 권리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식민지 시대 잠수들의 이동과 그들의 입어권은 식민지 체제에서 만들어진 불완전한 어업권이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대도시 안에서 정착한 B어촌계 잠수업자들과 같이 A와 B 어촌계 잠수업자들의 사례는 또 다른 맥락에서 불완전한 입어권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대도시 개발이 정착한 곳에서 또 다른 이동의 압력을 낳았으며, 그것은 다시 불안정한 어업권을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이들을 불공평한 계약 관계 속에 놓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6. 결론: ‘불안한 바다’

이상과 같이, 식민지 시대로부터 최근 부산 영도의 사례처럼 제주 잠수들의 이동은 ‘과거’ 속의 일이 아니며, 지금도 개별적이나 부정기적인 이동은 지속되고 있다. 타지에서 일을 한 후 벌어들인 현금은 제주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사실은 제주사회에서 일반적 담론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더불어 여성이 바다 일을 하여 돈을 벌어들였다는 사실은 강인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상이자 생활력이 강한 제주여성을 대변하는 상징이었다. 그러한 반면, 잠수에 대한 ‘전통적’ 담론은 그 안에서도 서로 모순적인 것을 볼 수도 있다. 가령 강인한 여성상으로 구축된 이미지 외에도, 잠수들은 매력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존재해 왔으며 그 까닭은 관광산업의 부흥이라는 경제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 본다. 근로의 여신으로 미화되던 담론과 달리 실제 잠수들에게는 대상화된 그들의 심리적 소외감이 자리해 왔다. 현재 세대계

승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지역사회의 상징적 미화(美化)와 달리 그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잠수에 대한 근로 여신의 ‘신화’화와 ‘권익의 수탈’의 역사로 자리해 왔던 이들의 이동 역사에 대해 이 글은 사회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으로써 분쟁의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본문의 내용에서 처럼, 타지로 이동하였던 제주 잠수들의 과거와 현재 현지에 정착하고 있는 잠수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잠수들은 완전한 권리에 의해 갈등적 상황 속에 휩싸여 있음을 보여준다. 식민지 시대 그들의 이동은 입어권을 가진 열린 어장으로의 입어인 듯하였으나, 그것은 종속관계로 놓임으로써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후 정주자로서의 어업권은 어장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을 인정받는 길이였으나, 부산의 사례에서 대도시 개발은 타 어장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다시금 불완전한 어업권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비단 어업권만이 아니라 해양생태의 변화와 해산물의 시장 가격 변동, 그리고 전통적 시선과 그것이 상품화 되는 복합적 상황은 잠수들의 바다를 더욱 불안정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과거 식민지 체제에서나 지금의 시장 경제 하에서 완전히 구속된 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 글에서 보다 더 역동적인 이들의 생활을 다 기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아직 불안하나 새로운 어장터를 “찾아찾아” 자신들의 생활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해가는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식민지 지배체제 하에서는 식민과 피식민의 이분법적 지배체제가 있었다면, 해방 후에 파생된 새로운 지역 간 분쟁이 야기되었음을 볼 때, ‘식민지시대’는 좀 더 넓은 시간적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글의 사례와 같이 제주 여성 잠수업자들의 이동은 정치적 지배구조 속 특수한 목적(자원

과 이를 채취할 수 있는 저임금의 노동력)이 개입되어 있던 식민지 시대가 만들어 낸 것으로써, 여기에 자유의 바다란 식민지 내 지역 간 갈등을 촉발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여성 생업자들의 이동은 비단 지역의 역사로서만이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 문화사 속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향후 보다 식민주의를 포함, 해양 및 여성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대원, 『濟州潛嫂權益鬪爭史』, 제주: 제주문화, 2001.
-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체: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학』 30(봄), 한국문화인류학회, 1996, pp.227~256.
- 김수희, 「日帝時代 濟州 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 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제주해녀박물관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6.6.7~8.),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2006.
- 김영돈, 『한국의 해녀』, 서울: 민속원, 1999.
- 아키미치토모야, 이선애 역, 『해양인류학』, 서울: 민속원, 2005.
- 안미정, 「濟州海女에 대한 이미지와 社會的 正體性」, 『濟州島研究』제15집, 제주학회, 1998, pp.153~193.
- _____, 「바다밭(海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전통의 정치: 제주도 잠수마을의 나잠(裸潛)과 의례」, 『한국문화인류학』제39집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6, pp.307~347.
- _____,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지역 간 경계를 넘는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탐라문화』제37집, 2010, pp.437~479.
- 이성훈, 「〈해녀 노 짓는 소리〉의 형성과 본토 전파」, 『우리文學研究』제24집, 2008.
- 제주도, 『濟州의 海女』, 제주: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토론회, 2011.10.17), 2011.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濟州海女史料集』, 제주: 경신인쇄사, 2009.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제주해녀: 항일운동, 문화유산, 해양문명』(제주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2006.6.7~6.8), 2006.
- 좌혜경 외 9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미』, 서울: 민속원, 2006.
-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제주: 각, 2004.
- 최성애, 「해녀의 이주생활사: 부산 용호어촌계 해녀에 관한 사례연구」, 『水産業

史研究』제2집, 1995.

秋道智彌, 2004, 『コモنزの人類學: 文化・歴史・生態』, 京都: 内外印刷柱式
會社.

李善愛, 『海を越える濟州道の海女』, 東京: 明石書店, 2001.

福田清一, 『志摩と朝鮮を小舟で往復した志摩の海女』, 三重縣: 不明, 2006,
pp.138~165.

Hardin, Garrett,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New
Series, Vol. 162. No. 3859.(Dec. 13), pp.1243~1248.

Pálsson, Gísli, 1991, *Coastal Economies Cultural Account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제남신문, 「빼앗긴 30년 삶의 터전: 부산 남천동 정착잠수 60명 눈물의 호소」,
1968년 3월 11일자 기사

_____, 「日本출가海女團 귀국: 20만원씩 저축해 흐뭇해 하고」, 1970년 8월
27일 기사.

제주신보, 「海女紛爭의 眞相」, 1954년 6월 9일 기사.

조선일보, 「해외진출 자원조사」, 1973년 1월 1일 기사.

ABSTRACT

**Conflict on the ‘Opening’ Sea
: A Critique on Colonial Custom and Freedom of the Sea**

An, Mi-Jeong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flict between women divers, “Jamsu” and local communities for fishing rights since moving from their hometown throughout the colonial and postcolonial period. It has been claimed to be the women’s strength, sacrifice and progressiveness that they used to leave home for fishing and come back. On the other hand, there has not been any discussion on social environment such as colonial rule which caused conflicts. The writer gave attention to the social back ground of this moving that took place under the colonial rule and examined what happened in colonial period and after the period. The fishing ground that these women worked on was local-commons and the aspect of the conflicts shows who and how to access the resources.

It has been shown that the women’s moving was forced in order to collect the natural resources rather than their fishing rights since the right of ‘free collecting’ and ‘free fishing’ was raised based on colonial custom and the fishing right at that time was not acceptable to local communities. It has been found the fishing of women divers that changed from movement to settlement without the fishing right in the seaport city(Busan). The women fishers ‘kicked’ by city development are working at neighborhood fishing ground however this fishing is taken place without any fishing right and has problematic tendency. I criticise ‘Freedom of the Sea’ that sea is free space for anyone through the women’s moving was caused by social factors and their settlement process.

· 키워드 : Women divers(Jamsu), Moving, Local-commons, Freedom of the Sea, Fishing right, Colonial custom, Conflict.

접수일(2011. 9. 30), 심사일(2011. 10. 24), 게재확정일(2011. 11. 9)